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실

▪ 주관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목 차

【토론회 식순 및 시간표】	5
【개회사】	
이주천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9
【환영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11
【축사】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13
【격려사】	
이규택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15
허평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17
【공수처법 발제 및 토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	21
윤창중 윤칼세TV 대표	37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제 및 토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41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47

【GSOMIA 발제 및 토론】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51

박태우 우리공화당 상근최고위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61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10:0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토론회 식순 및 시간표

일 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개회선언	사회자
10:00 ~10:05	5분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10:05 ~10:10	5분	내빈소개	
10:10 ~10:40	30분	인사말씀 <input type="checkbox"/> 개회사 : 이주천 원장 <input type="checkbox"/> 환영사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축 사 : 홍문중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격려사 : 이규택 · 허평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당일 참석한 국회의원	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
10:40 ~10:45	5분	축전 소개 및 단상정리	
10:45 ~10:50	5분	주요 내빈 기념사진 촬영	
10:50 ~12:05	75분	<input type="checkbox"/> 주제발표 - 주제별 15분 (합 45분) 1.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변호사) 2.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3.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input type="checkbox"/> 토 론 - 참석자별 각 10분 (합 30분) 1.윤창중 (윤칼세 TV 대표) 2.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3.박태우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	진행: 좌장

12:05 ~12:15	10분	질의 및 응답	
12:15 ~12:20	5분	총평 및 마무리 발언 : 조원진 공동대표	
12:20 ~12:25	5분	폐회 및 광고	사회자
12:25 ~12:30	5분	단체 및 개별 기념사진 촬영	

(사회: 강덕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상임이사)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이주천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 환영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축 사: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격려사: 이규택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환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 사회 : 강덕수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상임이사

개 회 사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공화당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이주천입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이 촛불시위와 사기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그리고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안보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71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노골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 '참사공화국'이 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국제적 고립으로 국가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조국사태에서 보았듯이, 헌법에 보장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망가뜨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좌편향 운동권 인사를 중용, 독단적 인사를 감행함은 물론 검찰개혁을 표방하며 삼권을 장악하여 좌파독재정권을 연장해 가겠다는 음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에서도 김일성의 갇끈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함으로써 한·일 협력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허물고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체제변형을 시도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北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음흉한 계락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12월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음모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진정한 우파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색하지 않으면, 71년 동안 소중히 가꾸어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후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선배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과 인신감금 970여일이란 전대미문의 정치보복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더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뻔뻔스런 악랄함은 국민들에게 더 깊은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는 나라의 명운이 촛각을 다투는 시간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른 3대 현안과제인 고위공직자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병자한 공수처법,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지소미아 폐지의 향배, 미니정당에 미끼를 던지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포석을 깔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논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공수처법에 관해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며 변호사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GSOMIA에 대해 각각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토론을 맡아 주실 윤창중 윤칼세TV 대표님,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님, 그리고 박태우 우리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 및 상임최고위원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 문재인정권의 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지혜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오로지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대표님과 당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이 주 천

환영사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난의 형국에 놓여있습니다. 한·미·일 안보동맹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 이대로 계속가면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2017년 중국에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담 등 이른바 3불 약속으로 안보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 친북정권이라는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결단하신 자유대한민국 수호협정이었습니다. 당시 좌파세력들은 조국의 '죽창가'처럼 반일감정을 이용했고 선동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보란 듯이 북한과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한·미·일 동맹 균열을 조장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든 철통같은 안보체계를 뒤흔들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 66년의 역사를 파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범 좌파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가짜춧불세력들의 온갖 선동과 거짓뉴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이라는 불법쿠데타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격렬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좌파 나눠먹기식 연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입법부를 좌파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집요한 좌파독재세력들의 대한민국 파괴 전략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좌파독재정권을 유지시

키고 장기독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국방, 교육을 파탄 냈고 요란한 구호만 난무한 채 어둠의 종착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를 봤을 때 이 정권의 종말은 가장 추악할 것이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좌측깜빡이만 켜고 좌로 좌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맞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문재인씨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투쟁,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공화당이 앞장서서 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오늘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는 우리의 투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고자 함입니다.

국민대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원장님을 비롯하여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윤창중 윤갈세TV 대표님,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님, 박태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애국의 힘으로, 우리공화당의 힘으로 문재인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반드시 저지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올림

축 사



STOP! 문재인, GSOMIA 연장!,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 홍문종입니다.

먼저, 한미일 동맹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지소미아 파기를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을 터줄 좌파독재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뜻 깊은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열정과 애국심으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대통령 문재인이 지소미아 연장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한미혈맹관계는 위험에 빠졌으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무장해제 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는 북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이고,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튼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로 말미암아 동맹도 없고, 번영도 잃는 것은 물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나라를 경험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운명과 한미일 동맹의 미래를 짓밟는 이들의 무도함을 더 이상 용인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2의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자멸적인 결정으로 좌파정권의 실체를 국민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도,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즉 좌파독재법의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조국이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공수처법에 아무리 분칠을 해도, 공수처법은 결코 좋은 검찰개혁 법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야당탄압의 전위대로 악용될 대통령 친위검찰을 만들

겠다는 정치적 음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문재인 좌파연립정권이 과반수를 넘어 개헌의석까지 확보하도록 선거공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법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당리당략적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좌파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까지 열을 세워서 문재인 좌파연립정권의 탄생에 기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단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한·미·일 동맹은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STOP! 문재인, GSOMIA 연장!,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더 이상 문재인 좌파정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 좌파와의 전면전을 각오하고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머리띠를 동여매고 싸워야 될 투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애국심과 투쟁의 의지로써 두려움 없이 승리의 그 날까지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 홍문종

격 려 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동지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한 보수우파로 인해 집권당의 리더인 대통령을 불법사기 탄핵하는 전대미문의 일로 정권을 찬탈 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좌파독재 정권의 음모는 점점 그 내용에서 국민의 분노와 절망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정당정치를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은 조국사태에 이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삼권분립의 존재를 부정하고 독불장군식의 인사와 사회주의편향 정책을 지향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찬탈한 정권을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고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시켜 그 독재 정권을 이어가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를 통해 반일감정을 일으켜 차기 총선에서 또다시 집권여당이 되고자 하는 음모이며 북한을 끌어들여 한·일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한·미·일 국가 공동안보체제를 무력화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계략입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보수궤멸 수단으로 시도되었던 것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공안부장검사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6개월 만에 야당의원 38명을 여당으로 빼가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의 국면으로 전환을 했던 바가 있으나 결국 보수궤멸에는 실패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내각제의 모방이며 내각제로 가기위한 목적의 다당제 통합을 시도해서 문재인좌파독재가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명백한 음모입니다.

이런 좌파독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붕괴될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파괴는 물론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고 국가경쟁력은 땅에 떨어지고 공산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 존립 위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
서 이런 귀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시는 이주천 원장님과 정정목 부원장님께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항상 애써주시는 조원진 홍문종 두 공
동대표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의견을 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귀중한 토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번득이는 지혜의 의견들
이 많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거짓에 저항하며 싸워 온 지난 3년여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
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태극기와 함께 선봉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진실
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는데 우리공화당이 그 주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 규 택

격려사



좌파독제정권 연장 음모를 저지하여 연방제통일을 막아내자!

오늘 우리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좌파독제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차단시키기 위한 국민 대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목표인 남북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무리한 권력연장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12월3일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전시작전권환수를 추진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간의 정보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일 삼각 정보교류요 군사협력체제 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체제 나아가 한미동맹까지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이 땅의 평화를 지켜온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한·북·중 삼각 군사협력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 입니다.

연동형비례제는 남·북 연방제통일을 위한 개헌을 하기위한 음모 입니다.

공수처법은 연방제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고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을 제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지소미아 폐기와 연동형비례제입법과 공수처 설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나서서 태극기 애국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광장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왔습니다.

오늘 국민 대 토론회를 통하여 문재인 좌파독제정권의 권력연장 나아가 연방제통일 음모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차단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 합니다.

대 토론회를 준비해 준 이주천 연구원장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우리공화당 상임고문 애국정책연구원 고문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환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및 토론

-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의 이해

발제: 박인환 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변호사

토론: 윤창중 윤칼세TV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해

발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토론: 곽성문 자유일보대표

- GSOMIA(한·일 군사보호협정)

발제: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토론: 박태우 우리공화당 상근최고위원,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공수처법 -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발제자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서울중앙지검검사)

1. 역대 국회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발의 경과

- 15대 : 1996년 야당인 국민회의가 ‘특별검사제’ 도입, ‘고비처’ 신설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최초로 발의(참여연대 등의 입법 청원)
 - * 초기에는 공수처가 홍콩의 영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독립된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서 주로 논의됨(TI 및 CPI 지수 관리)
 - * 1999. 10. 최초 특검 도입 :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 16대 : 공수처법안 발의 후 폐기, 그 대안으로 2001. 7.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2002. 1.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출범
 - *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출범(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통합)
- 17대 : 공직부패수사처법안(정부안)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됨
- 18대 : 공수처법안 3건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됨
- 19대 : 공수처법안 4건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그 대안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종전의 개별 입법에 의한 특별검사제도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 특별검사제(제도적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제도를 법제화하여 도입
- 20대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바른미래당, 평화당 분리 이전) 양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 등 발의[기타 노회찬, 양승조 의원 등]

0 현재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0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019. 10. 29.부터 패스트트랙에 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천명함

0 공수처 설치에 특검이 도입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20년 이상 끈질기게 함께 17건의 관련 법안이 따로 제안되는 등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준사법기관인 전통적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좌파 진영의 최대 숙원사업임[선출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2. 여권의 공수처 법안 강행처리 방침 천명

1) 공수처 설치에 관한 여론 조사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57% 내지 65% 이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음

2) 법안의 강행 처리 의도 분석

- 0 검찰권 남용 방지와 검찰 개혁을 핑계로, 공수처의 설치를 조국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활용 : 조국 관련 사건의 공수처 이관 가능
- 0 그 동안 법원행정처 존폐,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 개혁’ 논의가 조국 사태 발생 이후 느닷없이 국민인권 보장을 핑계로 ‘검찰 개혁’으로 변경
- 0 검찰권 약화, 공수처 직할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강화 : 공수처장 임명권
- 0 법조계 장악, 고위 공직자(군인 포함), 야당 등 반대파 탄압 : 민변 등 동원 (‘법무부의 민변화’와 함께 ‘공수처의 민변화 또는 참여연대화’ 우려)

3) 강행 처리의 문제점

- 0 공수처 신설에 관한 정부안(조국의 법무부안)이 없음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 목적을 높이던 조국의 법무부(법안의 주무부서 법무부)가 내놓은 정부안(자체 법안 또는 조국안)이 없음
- 0 백혜련 의원, 권은희 의원안만 패스트트랙 계류 중으로 얼렁뚱땅 처리 가능
- 0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신설로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 흔한 공청회, 유관기관 의견 조회 등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상태임
- 0 이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 내용, 디테일도 깜깜이 상태로 현재 법안의 제목만 놓고 전 국민이 다소 엉뚱하게 ‘공수처 찬반’ 논란을 벌이는 형국임

3. 공수처 법안의 찬성론 근거

- 0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에 의한 막강한 재량권을 견제
- 0 사정기관의 권력분점으로 경쟁을 높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효율적 방지
- 0 홍콩의 염정공서 등 해외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사회적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0 현재의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한정으로 성과에 한계, 특별감찰관은 지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에서 보듯이 한계 노출

* 백혜련 의원 등 공수처법안의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4.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

1)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

0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 정치이슈를 대화, 타협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수사만능주의 풍토 하에서 상대 정치세력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의뢰가 난무하는 정쟁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음

- 표적수사를 통해 상시 사찰기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현재 특별감찰관 제도)
- 2002년 병풍사건, 2007년 BBK사건,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처럼 향후 대선에서도 중요한 정치쟁점이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여야 대립이 심한 정치현실에서 공수처가 언제든지 국정 통제수단 또는 정적제거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쟁도구가 될 수 있음
-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언론까지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의 고위 공직자와 군, 법원, 검찰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음

0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고, 법무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과 달리 아무런 통제·견제를 받지 않아 '주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
-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공수처를 통해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악화될 수도 있음
-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수사 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게 하여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형해화시킴으로써 절차상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공백 우려(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는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 인사들의 권력형 부정비리가 그 원인임)
-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같은 수사권, 영장청구권에다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직접 기소권을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검찰의 권한도 행사하게 됨

0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 가능성

- 공수처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경우 정치적 사건을 편파수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계진출을 도모할 현실적 우려가 있음

- * 조영천 의원(박근혜 전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 권은희 의원(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축소 은폐지시 폭로)

2)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

0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에서 행정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 *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0 수사, 기소는 준사법행위이면서 권익 침해적 권력 작용이므로 그 담당기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함이 상당

- * 행정부는 ‘총리와 행정 각 부’로 구성, ‘수사 및 기소’는 ‘법무부’ 소관

0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임

- * 검찰에 관하여는 헌법 규정이 있음(검사의 영장청구권, 검찰총장 임명)
- * 헌법적 근거 없이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위’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 있는 행위는 할 수 없고 강제력 없는 권고적 기능만 보유함

0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공수처의 수사, 그 외의 국민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신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및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통일성 저해 우려

3) 소추기관(기소기관)의 이원화 문제

0 거의 모든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형사사법의 통일성(국가형벌권 적용과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소제기(기소) 기관을 검찰로 일원화 하고 있고, 기소권을 2개 이상 기관에 분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0 홍콩, 싱가포르 등 주로 검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영국계, 중공계 아시아권 도시국

가 수준의 작은 국가를 중심으로 기소권 없는 부패전담 수사기구를 운영 중임(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기소권 있다고 하나 파견된 검사가 기소권 행사)

4)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

0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상설 특별검사제(제도특검), 특별감찰관제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성과

0 현재 시행 중인 상설 제도특검제·특별감찰관제의 보완 없이 또 다른 권력기관 창설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에 불과하고, 권력기관(사정담당기관) 상호간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며, 인력·장비의 중복 등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가 불가피함

0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과는 별도로 25명 정도의 수사처 검사를 포함해 수사 인원 등 직원이 75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출발하여, 판,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 및 검찰 수사와 겹칠 경우에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에 불과함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의 경우 경찰과 권한 다툼 사례]

○ 1차 도마뱀(KPK) 대 악어(경찰) 케이스

- 2009. 5. KPK가 인도네시아 센투리 은행의 구제금융 스캔들과 관련하여 경찰국장 수사 계획을 발표하자, 경찰은 KPK 위원장을 살인교사 혐의로, 부위원장을 출국금지처분 관련 권한남용 및 수뢰 혐의 혐의로 체포
- 결국 KPK 위원장은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 확정되었으나, 부위원장에 대한 공소제기는 중지되었고, 센투리 은행의 구제금융 스캔들 사건은 미제로 남음

○ 2차 도마뱀 대 악어 케이스

- 2012. 12. KPK가 교통경찰국장의 수뢰혐의 관련하여 경찰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경찰

이 이를 저지하면서 KPK 담당 수사팀장의 8년 전 총기발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팀장 강제연행을 시도

- KPK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교통경찰국장을 체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반발하여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복귀를 지시하였음

○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과정에서 KPK 수사의 독립성 훼손

- 2015. 1. KPK는 대통령이 지명한 경찰청장 후보자를 부패혐의로 수사, 경찰은 KPK 부위원장을 위증으로 체포, 위원장을 여권법위반으로 수사
- 2015. 2. 18. 대통령은 NGO 출신이던 기존 KPK의 위원장을 경찰 출신이자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으로 교체하고, 경찰이 체포했던 KPK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의 위원을 교체
- 새로 교체된 KPK 위원들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

5)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20년간 폐기된 법안

0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은 검찰 이외 별도의 부패범죄 전담수사기구가 없고, 국회의원 등 특정한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도 없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등 검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몇몇 영국 및 중공계 도시국가 규모의 소규모 국가를 중심으로 기소권 없는 부패전담 수사기구를 운영 중임 [최근 중국 시진핑 정권의 국가감찰위원회]

0 거의 모든 국가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사사법의 통일적 적용을 이유로 기소기관을 검찰로 일원화 하고 있으며, 기소권을 2개 이상의 기관에 분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검찰총장은 헌법 규정이 있으나, 수사처장은 헌법 규정이 없음)

0 국내에서도 1996년 ‘부패방지법’ 이후, 20년간 10여개 공수처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위헌논란, 실효성 문제 등으로 폐기되었으며, 현재 20대 국회의 공수처 법안 역시 과거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함

6) 상시 사찰기구화 또는 무능한 수사기관화 우려

0 고위공직자 비리는 주로 기업범죄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확보되나, 공수처는 기업범죄 수사권이 없어 독자적 비리 적발이 어려움

* 최근 5년 홍콩 영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기소인원의 88.2%, 90%가 각각

일반 국민이고, 특히 별도의 반부패 전담수사기구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홍콩 염정공서의 경우 부패 수뢰공무원 기소는 年 평균 3명에 불과

- 0 공수처는 이처럼 수사단서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시적 성과 도출이라는 조직생존 논리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을 표적으로 미행, 함정수사를 하는 비합법적 수단의 비정상적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높음
- 0 특히,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정기인사가 없어 간부·직원들이 계속 동일 보직에 장기 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권력기관으로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표적수사, 청탁수사나 무제한 수사, 보복수사 등 비합법적 수사가 우려됨(일단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면 그 대상자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0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장기간 수사역량이 축적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검찰에 비해 고위공직자 등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무능한 수사기관이 되기 쉬움

[홍콩 염정공서(ICAC)의 경우 수사 방법이 문제된 사례]

○ 변호사-의뢰인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 사례

- 염정공서의 수사과정에서 정보원을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던 사건에 있어서 2011. 항소심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특권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

○ 도청 등 수사기법이 문제가 된 사례

- 염정공서의 수사과정에서 T호텔 레스토랑 귀빈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150분 동안 출입자에 대해 촬영까지 하였고, 다른 레스토랑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인근 테이블의 회의와 대화내용을 영상녹화 하였으며, 염정공서는 이를 통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자백과 다른 증거를 얻어냈음(홍콩지방법원 사건)
- 1993. 11. 10. 前 염정공서 공작부국장(Alex Tsui)은 의회에 출석하여 염정공서가 첩보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찰이 되고 있다고 주장, 그 예로 정부 고위 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음
- 홍콩 민주당 의원(Lau Chin-shek)은 자신의 사무실 전화가 도청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00년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들 전화가 도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7)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배제에 따른 문제점

- 0 공수처의 직무 또는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사정기관의 직무와 범죄수사는 공수처로 이관·이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공수처장은 검찰의 수사,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공수처에 전속적, 우선적 수사권 부여)
- 0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권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공수처에 전속수사권을 부여, 그러나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입법례는 없음
 - * 독일 형사소송법 161조 1항 :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프랑스 형사소송법 41조 1항 :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
 - * 일본 형소법 191조 1항 :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0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당분간 부패수사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임
- 0 공수처에 전속적,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부패범죄 수사의 공백을 야기하는 문제점 외에도, 중복 수사의 판단기준·주체, 기존 수사기관의 이관·이첩 시기, 기존 수사기관이 공수처 전속관할 사건을 수사·기소한 경우 그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음
- 0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하급 공무원과 일반 민원인에 의한 뇌물수수 등 공동 부패범죄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하급 공무원이나 민원인(증뢰자)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여 기소하고, 고위공직자(수뢰자)만 분리하여 공수처에서 따로 수사해야 한다면, 관련 공범 사건의 수사와 재판상의 문제점 야기

8) 검찰개혁 문제는 독립성 확보, 사법통제, 시민·언론감시 확대 등으로 해결

- 0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장담할 수도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도 않는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창설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수는 없음

* 2017. 1.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YTN 여론조사 결과,

- 1) 수사공정성 확보(34.5%) 2) 검찰권한 축소(27%)
- 3) 비리전담기구 설치(19.3%) 순으로 응답

0 검찰수사의 공정성, 검찰권 견제 내지 축소, 검사비리 근절 등 문제는 새로운 권력 기관 창설보다는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제고, 사법통제, 시민·언론감시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 함

5. 해외의 부패전담 수사기관 사례(아시아권)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	홍콩 염정공서	대만 염정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소속	대통령 직속	행정장관 직속	법무부 소속	총리 직속
설립	2003년	1974년	2011년	1952년
수장	•위원장(국회동의 →대통령 임명) •위원 5인 (대통령 10명 추천 →국회 의결 선출)	•행정장관 추천→ 중화인민공화국 의회 임명	•13~14 직급 공무 원 중 임명	•총리 지명→대통 령 임명
규모	• 약 1,100명 근무 (수사관 91명, 검·경 파견 인력이 80%) ※ 인구 2억6천만	•약 1,200명 ※ 인구 723만	•약 212명 ※ 인구 2,346만	•약 200명 근무 ※ 인구 540만
수사대상	공무원(군인 포함)	제한없음(민간 포 함)	공무원	제한없음(민간 포 함)
대상 범죄	부패사건	•부패 관련 범죄, 공 직남용행위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 뇌물 범죄	뇌물범죄, 횡령 권한남용 등 부패 범죄	수뢰,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수사과정 에서 발견된 다른 범 죄도 수사)
권한	▶ 수사권 ○ ▶ 기소권 ×	▶ 수사권 ○ ▶ 기소권 ×	▶ 수사권 ○ ▶ 기소권 ×	▶ 수사권 ○ ▶ 기소권 ×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	홍콩 염정공서	대만 염정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他기관 중복수사 가능(먼저 수사 개시한 기관 우선) - 파견검사가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수사는 염정공서 전담(부패범죄발견시 이첩) - 율정사(법무부) 검사가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署검찰관(파견검사)이 수사 지휘 - 他기관 중복수사 가능(駐署검찰관 조정) - 駐署검찰관이 소속 검찰청 결재받아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他기관 중복수사 가능 -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송부(검사기소 승인)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과의 대립 (도마뱀 vs 악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청 등 불법수사 •공공분야 수사저조 		
비고	年 50~60건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 1,184명 기소, 그 중 공무원 140명(11.8%) •뇌물 기소 공무원 연평균 3.4건 	2015년 1,205건 접수, 59건 기소	2015년 132건 입건, 120명 기소 (공무원은 10%)

6. 대안적 해결 방안

1)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찰관 제도 및 상설 특검제(제도 특검)의 적극적 활용

0 문제인 정권은 출범 이후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사법 개혁’을 외치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는 돌변하여 ‘검찰 개혁’을 빌미로 공수처 논란에만 급속히 매몰되고 있음

0 그러나 고위공직자 부패문제 처벌과 관련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도입된 바 있는,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관조차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음(차정현 특별감찰관실 감찰과장의 직무대행 체제 유지하다가 2018. 4월 종료)

* 문 정권의 직무유기, 실정법을 형해화(形骸化) 하는 법치주의 위반

0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선임행정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김태우 특감반원(검찰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처럼 별다른 실적은 없고 근거법의 미비로 직무범위의 불분명 등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반부패비서관은 과거 청와대 사정비서관 역할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기관으로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임명, 2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지원 요청)

*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면 감찰 착수 가능(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 박근령, 우병우 사건)

「특별감찰관법」상 '비위행위'는,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임

0 따라서 기존에 도입된 부패방지 전담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적 상설 특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부패전담 기구로서 추가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효과적임

2) 홍콩 염정공서의 모델 활용

0 1974년 설립된 홍콩의 염정공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1) 범죄자를 처벌하는 집행처(*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음)

2)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방지처,

3) 그 밖에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를 맡는 사회관계처(홍보처)로 나뉘어 부패에 관한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7년 당시 리밍저(李銘澤) 염정공서 집행처 수장은 “공무원 부패

신고가 과거 80%에서 20%까지 감소해 이제 공직사회의 청렴을 자신할 만하다”고 했다. 대신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패 신고가 10%에서 60%로 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집중 감시대상이 됐다고 말한바 있음

0 최근 우리나라의 공수처 논란은 고위공직자 등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의 견제나 정치권의 간섭 배제 등 특별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확보에만 중점을 두고,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수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은 간과해 온 경향이 있음

0 반면에 부패방지 법률 및 제도의 주무 부서에 해당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그 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어 온 과정에서 아직까지 반부패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부족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다시금 새겨들어야 할 것임

0 따라서 차제에 또 다른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의 주무 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처럼 부패방지기능을 분리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조사, 나아가서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패와 관련한 범죄의 전속적 수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가칭 ‘부패방지청(또는 국가청렴처, 국가청렴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이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음]

0 이러한 부패방지청은, 국민권익위 소관의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관련 업무과 함께 공직자재산등록 및 조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관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부패방지 및 단속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 달성(사전예방 기능과 사후통제 기능의 통일성 있는 결합)

*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립**

0 부패방지청은 그 모델이 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전담 기관으로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나 공소유지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검사동일체 원칙 하의 검찰권을 통한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집행의 통일성 유지)

0 특히 부패방지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그 중 일정한 신분, 즉 고위공직자에만 한

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제 부패문제는 전통적인 공직 분야뿐만 아니라 널리 사적 영역에서도 공익침해와 같은 행위는 부패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0 앞으로 공수처 도입 등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수사기관의 설치 문제는 ‘수사대상자를 직급에 따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이나 아시아권 국가 중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3)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민주적 개선(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 0 고위 공직자 관련 부패행위는, 최근 조국 사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 측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비리, 불법행위에서 비롯됨
- 0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적 견제 수단으로는 공수처장의 후보자 2명을 집권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에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현재 공수처법안에는 7인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음)
- 0 특검후보자 추천권 사례 : 제1야당 등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2012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2016년)
- 0 국가형벌권 적용과 집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공수처에 수사권은 부여할 수 있으나 기소권은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공수처법 -

공수처법 관련 토론

토론자 : 윤창중 (윤칼세 TV대표)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a memo. The box is vertically oriented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s width and height.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a memo.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해

발제자 : 남광규 (배봉통일연구소 소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분석

1. 연동형비례대표제란?

- 국회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
- 간단하게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식.
- 현재 300석에서 지역구 225석+연동형비례로 75석 채운다는 것.
- 예로,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기록→ 전체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지도록 하는 것.
- 예로,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A당이 지역구에서 20석,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을 경우→A당은 지역구 20석+비례대표 25석(비례대표 의석수 1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45석을 차지하게 됨.
-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
- 그러나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움.
-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
- 현재의 소선거구에서의 당선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차이.

2. 채택할 경우 예상되는 투표절차와 문제점

-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 현재 국회의원선거 때와 여기까지는 같음.
-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집계해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
- 지역구 후보자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임. 일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패율제라는 제도를 사용.
- 중요도가 높은 지역구에 여야의 중량급 정치인이 같이 출마하여, 그중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높은 지지도에도 낙선자는 원외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
- 지역구에서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음.
- 반대로 함량미달의 후보가 쉽사리 당선될 수도 있음. 정당이 의원을 결정하는 격.
- 지역구 의석에서 정당득표율을 이미 채울 경우, 비례의석은 0석. 초과의석 시 전체

의석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체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임.

3. 장점(명분, 주장의 근거)과 단점

- 현재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불비례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 지역이기주의, 극한 대치, 대량 사표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표발생을 최소화해서 소수의견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함. 군소정당에 유리.
- 소선거구제가 갖는 지역구선거의 '승자 독식' 완화.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재편.
-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기기 힘들어 연정은 필수가 되어 사실상 내각제 운영이 됨.
- 초과의원문제와 함께 최소한의 득표율조항이 낮아지면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의 전국적 범위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정치공학이 너무 심함. 선거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지역구에서 심판받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음.
-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없어 이석기가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4. 각 정당별 유·불리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유리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불리.
- 우리공화당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참여가 없어 평가 유보.
- 단순히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대입하면 1차 비례대표 배분에선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0석. 국민의당은 15석, 정의당은 9석을 확보.
- 2차 배 분은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배분된 24석을 제외한 나머지 51석을 나눔.
- 2차 배분에선 국민의당은 54석(지역구 25석+1차비례배분 15석+2차비례배분 14석), 정의당은 15석(지역구 2석+1차비례배분 9석+2차비례배분 4석)을 가져가게 됨.

5. 근본적인 문제점

- 의원내각제인 독일과 같은 선진 민주국가가 아니고 정치문화가 미성숙한 상태임.
- 통진당과 같은 반체제 정당의 원내진입의 제도화가 가능.
- 정당이 75명의 의원을 선택하게 됨어 검증되지 않은 의원들의 원내진입 가능.
- 사실상 75명의 위원을 소속 정당이 의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임.
- 정당이 사실상 이익집단, 소수의견의 지나친 정치세력화, 다양한 이슈를 내건 혹은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1인정당의 난립과 국회진입이 용이해지므로 국가적 차원의 의회 정치가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연동형비례제는 “선거포플리즘”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음
- 대한민국을 정치인이 ‘잘게 쪼개고 나눠가져’ 사실상 ‘콩가루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분단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될 때 남북총선 시 북한에 필패.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자 :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

1. 불공정 룰(Rule) 불공정 게임(Game)

*선거법개정의 여야 합의 원칙 깨지나?

2. 다당제로 간다 - 정치지형의 대격변

*소수정당의 의석 확대에 유리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만 내는 정당; 선거공약, 정책홍보

*종교 정당의 출현, 허경영당

3. 다수의석 확보의 교육책

*50년 집권론의 꼼수, 히든카드

*숨어있는 꼼수 - 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4. 담합 시나리오 예상

1. 거대정당과 군소 정당의 투표 담합;

지역구는 A, 정당지지 투표는 B, C당으로

2. 2중대, 3중대 정당의 창당지원, 비례의석 확보 후 통합

3. 정책 연대를 통한 통합

5. 향후 처리 방향은?

1.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통폐합 의원들의 반발

2. 국회정원 30 석 증원 논란

3. 자유한국당; 과연 총력저지 의사 있는가? 의원직 총사퇴 논란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지소미아 (GSOMIA) -

동북아 안보정세와 지소미아 파기 시
미국의 보복!

발제자 :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1. 동북아시아 안보정세 -한국은 동네북 신세-

(1) 미군의 아시아 지역 점진 철군과 한일공조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

- 핵무기 없는 한국에 지켜주는 댓가 내라!
-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불한 만큼 주한미군 남긴다.

○ 일본: 과거사 논쟁 및 국내정치 활용

- 문 정부, '지지층의 반대 불구 지소미아 파기 철회 어려워'/위안부 합의 파기 및 징용배상판결 한일 합의 방치
- 미군의 아시아 지역 철수 시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혼자 핵무장 결단 못해, 일본과 공동보조 절실

(2) 중국·러시아의 군사동맹

○ 중러는 준 군사동맹/사실상 군사동맹 국가화

- “중러가 군사동맹 체결방침을 굳혔으며, 동맹을 규정하는 문안을 협의중”(10.29교도통신)
- “중러 중 한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지원하는 상호원조 조항을 합의문에 넣을 지가 초점”
- 시진핑 주석,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빈방문 “중러 간 신시대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 푸틴, 9월말-10월 초 사이에 세번이나 중러 관계를 ‘동맹’이라는 러시아어 “사유즈니체스키”로 표현

○ 10월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간 회의

- 푸틴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체계를 중국이 갖도록 돕겠다.”

○ 10월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프로맷’ 보도

- “중러는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한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S.P.R.N)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는 6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3) 중국·러시아의 대규모 연합훈련

- 매년 러시아가 실시 대규모 군사훈련에 중국군 동참
 - 9월 중순 러시아 병력 12만 8천명 동원해 실시한 ‘중부-2019’ 훈련에 중국군 파병
 - 2018년 극동지역에서 개최된 중러 연합군사훈련에 중국 등 탱크, 장갑차 등 지상군 무기 대거 투입
 - 양국 해군, 발틱해/서해 등에서 해군 연합훈련
- 중러의 미국·동맹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 대응 사건
 - ⇒ 지난 7월 중러군용기들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비행훈련을 하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하며, 독도 영공 침범한 것이 상징적 사례

(4) 북한의 핵무기 기반 군사적 압박

- 북한, NLL인근에서 소규모 선제 도발 후 “도전할 용기가 있으면 도전해 보라!”
 - 청주에 F-35A 배치에 대해 “초토화” 협박
 - 대통령에 대해 “맛을 짓하지 마라,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질긴다” 모욕적 언사
-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4종세트 및 SLBM
 - 400mm, 초대형방사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와 SLBM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
 - 노동미사일, 북극성-2형 등 중거리 미사일 고각발사 시 방어 불가능

(5) 소결론

- 대한민국 안보는 5면 초가
 - 미국과는 동맹균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
 - 일본과는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논란, 욱일기, 지소미아 파기, 과거사 문제로 사실상 적대관계
 - 북중러의 군사적 압박 심화
- 트럼프 행정부가 ‘아더매치’하더라도 당분간 안고 가야!
 - 조용히 핵무장 기반 조성하고, 미군이 떠나는 시점에 일본·대만과 핵무장 공동보조해야 한다!

2. 지소미아 파기 퍼펙트 스톱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 8.22 NSC회의 전 청와대 입장(보도)

-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청와대가 '한미일 정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는 3가지
 - ①폐기 ②자동연장 ③조건부 연장
- 이 가운데 ③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도
- 조건부 연장이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 "
-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문재인 대통령, 총리·NSC위원과 토론

- 8.22 오후 3시부터 NSC상임위 회의 개최, 오후 5시 20분 경 결과발표 예정
- 실제 1시간 늦은 오후 6시 20분 발표
- 외교부, 국방부 지소미아 파기에 부정적
-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 참석 하 NSC위원들과 1시간 동안 토론 끝에 협정 파기 결정

■ 8.22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전문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저의

① 사상적 배경

- 남북한이 건국을 1919년 상해임시 정부수립으로 소급하여 공통분모 마련, 연방제 통일 기반 조성
- 남북한이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일제식민피해’ 내세워 ‘공동의 적’으로 일본 상정
- 주사파 종북노선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극렬 비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부응 필요

② 당면 목적

- 반일 정서를 지속 유지하여, 『반일=문재인, 친일=자유우파』들을 활용, 4.15 총선 승리 기도
- 조국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악화를 반일정서로 분식(粉飾)
- 김정은을 달래(反미, 反일), 남북정상회담 쇼 개최 기반 조성

■ 일본의 입장

① 문재인 정부의 협정 파기 전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한국 측과 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 “협정 파기하면 동아시아 안보에 악영향 줄것
- 이와이 방위상: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는 것“,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② 파기 후 반응: “극히 유감이다”

- 일본 방위성 간부: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
- 일본정부 관계자: “유감이지만, 한국 측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 자세 바꿀 수 없다”, “방위 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일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

③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 8.24 트럼프, 문재인 비난

○ 프랑스 G-7정상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관련

-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8.26 요미우리 신문)
- "(지소미아 파기) 한국의 태도는 너무한다. 현명치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앞보이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상 8.26 산케이 신문)

⇒ 청와대 반응: "근거 없는 보도. 한미동맹 이상 없다"

■ 미국의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 파기' 반응

○ 8.22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 한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

"ROK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
(지소미아 파기가)문재인 결정에 초점 맞추기 위한 것"

○ 청와대, "미국이 우리 결정 이해했다."

⇒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 '거짓말', "명확히 사실 아니다."

○ 8.22 미국 국무부, 조선일보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이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

○ 8.25(현지시간) '모건 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

- “이는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청와대 반응

- 지소미아 종료 전후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입장도 수시로 공유되고 있다.
- 양국 간 오해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철회 설득 노력

○ 11.5-6 미국 방위비 특별협정 협상대표 ‘드하트’ 방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방위비 파악하러 왔다.”

○ 외교소식통, “워싱턴에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연계’ 논의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비핵화 협상과 분담금 협상의 마지막 카드는 주한미군”

○ 11.6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강경화, 김현종 차장 면담

- 김현종은 ‘지소미아 파이터’
-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달라 요청”

■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파기 철회’ 압박

○ 11.14 한미 합참의장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 및 11.15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통해

- 전시작전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의/ 지소미아 파기 철회 요청

○ 11.12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러 등 주변국에 (한미일)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 줄수 있다.”
- “지소미아의 근본원칙은 동북아 역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

■ 11.20 문 대통령, ‘지소미아 파기’ 강행시사

○ 11.15 문재인 대통령, 미국 국방장관 면담 시 발언

-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11.20 ‘국민과의 대화’ 때도 반복

○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 발언

-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 하겠다

■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시 조치

○ 미국 국무부 관계자, “11.23 미국은 가장 강한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

- 이 성명은 국무부가 아니라 백악관이 주도할 것

○ 미 행정부 관계자(2명)

- “한국이 끝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

-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톱이 붙어 닥칠 수 있다.”

■ 지소미아 파기 관련 워싱턴의 분위기

○ 미국의 안보전문가들 반응

- 한국의 설득 공세는 ‘지소미아 파기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 지소미아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일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종료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 “미국은 문 정부의 종료결정이 불만스럽고, 미국 안보와 한미동맹에 상당히 해를 끼칠 것”

- “문정부가 미국의 국방부담을 증가시켜 신뢰 잃게 될 것

○ 11.10 V.O.A

- “한미동맹이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 안보가 위협에 처할 것”

○ 워싱턴 한 안보전문가

- “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고수하면 한국이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 증명하는 셈”

○ 전 트럼프 행정부 관리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응은 한미가 그 동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쌓아 왔던 이견과 오해 때문에 생긴 감정이 더 해졌다.”

■ 평가 (퍼펙트 스톱 예측)

① 미국의 비난 성명 ⇒ 동맹 균열

②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비타협적 자세

③ 문 정부 측이 제시한 분담금 수준에 맞춰 미군 감축

- “미 제1기병사단 제1여단 등 육군 전투부대 전면 철수

④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

⑤ 북한 및 중러 관련 정보 제공 전면 중단

- 위성사진, U-2 사진, 첨단 정찰자산 통한 감청 정보,

⑥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 카드 제시

⑦ 미국의 한국 수출품 관세인상(동맹 프리미엄 소멸)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지소미아 (GSOMIA) -

동북아 안보정세와 지소미아 파기 관련 토론

토론자 : 박태우
(우리공화당 상근 최고위원/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the memo.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a memo.

지소미아 파기 · 공수처법 · 연동형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실
- 주 관 :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40 준빌딩 5층
Tel. 02-2634-2100
Fax. 02-2634-2102
이메일 dldydwn0830@naver.com
홈페이지 <http://ppsr.co.kr>